

헌법각론

4주차

이정덕 교수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I. 서설

1. 의의 :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입법례 :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명시하고 있다(5차 개헌).
3. 보호범위 : 다수의 견해와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만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5차개헌 :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됨으로써 이루어진 헌법개정. 이듬해 1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개헌안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며,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속한다.

II. 주체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국민경제적 상황과 결부되어 보장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국적의 보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 향유주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외국인에게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국민만이 주체가 된다.
- 다만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III. 내용

-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신체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급부와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사회보험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 공적부조
 - 생계가 불능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공의 비용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 사망 또는 상해 등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본인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 사회복지
 - 여성, 신체장애인 등에 대해 국가가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IV. 제한.한계

- **사회국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구체적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권리 그 자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의미하는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제한이 불가하다(학설). 법률로써 제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전]국민 각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할 것을 임무로 하는 국가. 또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위반된 법령에 대하여는 위헌성 여부를 다룰 수 있다.

판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헌재 2002.7.18, 2000헌바57)

한정위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위반된다 할 것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헌재 2000.6.29, 99헌마289)

기각

법상의 보험료부과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하는 부과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파악된 실소득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64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헌재 2003.6.26, 2001헌마699)

기각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재량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 서설

1. 의의

- 교육을 받을 권리란 개개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주체

- 주체는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이는 평생교육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교육받을 권리는 권리 주체인 아동보다는 아동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상당히 강조되는 권리라는 점이다.

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한 것인바 여기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수학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수학권은 주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에서의 수학권을 의미하나 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교육에서의 수학권도 의미한다.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받을 권리이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10.26, 2004헌마13)

3. '교육'을 받을 권리

-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서는 교육의 의무 및 무상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

중학교 의무교육의 경우(헌재 1991.2.11, 90헌가27)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써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Ⅲ.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1. 부모의 자녀교육권

(1)개념

- 부모가 자녀를 학교 교육 및 가정교육을 통하여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0.4.27, 98헌가16).

(2)특성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3)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

판례

과외의 원칙적 금지(헌재 2000.4.27, 98헌가16 등)

위헌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사인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 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 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 제3조의 주된 입법목적은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을 부추기고 과열시키며 사회적 폐단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액과외교습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법 제3조는 과외교습이 그 성질에 비추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뿐만 교육을 기본권으로써 보장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반사회성을 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제3조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교사의 교육의 자유

-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본 견해도 있으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제도 사건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판시하지 않았으나, 그 후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재 2003.9.25, 2001헌마814 등)'라고 판시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헌법 제31조에서 구하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IV.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 이는 제도보장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은 교육제도,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국가권력의 임의적 재량으로부터 교육의 권리, 교육제도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의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 전단)

- (1)자주성 : 교육기관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가권력 등에 대한 방어권,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판례

대학모집정원미달과 불합격처분(대판 1983.6.28, 83누193)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전문성 : 교육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교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이므로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3)정치적 중립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환경의 자유를 의미한다.

판례

교육위원의 경우 선거운동 제한(헌재 2000.3.30, 99헌바113)

합헌

지방교육자치에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기관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제한은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V. 교육의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 무상의무교육(헌법 제31조 제3항)

1. 교육의 의무

- 권리의 주체는 학령아동이나, 의무의 주체는 친권자, 후견인이 된다. 헌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한 경우 교육을 시킬 의무가 면제된다.

2. 국가의 의무

- 헌법 제31조 제2항의 의무교육제도는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의 무상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의 취학필요비무상설이 다수설(수업료 뿐 아니라 교재비 등도 포함)이다.

판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헌재 2008.9.25, 2007헌가1)

합헌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3절 근로의 권리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I. 근로의 권리의 의의

- 개인이 자유로이 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을 국가가 방해 내지 제한하지 못한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권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II. 주체

- 일부 이견이 있으나 자연인인 국민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다수 견해이다. 다만 판례의 경우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고 해서 비판 받고 있다.

판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의 제한(헌재2011.9.29, 2007헌마1083 등)

합헌

외국인고용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Ⅲ.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 사회적.경제적 방법에 의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해고의 제한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절차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위헌, 무효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근로자의 직장상실로부터 보호할 의무(헌재 2002.11.28, 2001헌바50)

합헌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내지 기본권 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근로의 권리로 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이다.

3. 최저임금의 보장

-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 OECD 주요 국가 최저임금(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독일
2010년	4,110원	3만 2,880원	858,990원	2.75	영국
2011년	4,320원	3만 4,560원	902,880원	5.1	
2012년	4,580원	3만 6,640원	957,220원	6.0	프랑스
2013년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6.1	멕시코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미국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캐나다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일본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호주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뉴질랜드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9.19유로(2019년도 기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년(9.88유로) 대비 1.52% 인상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년(88.36페소) 대비 16.2% 인상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2018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엔) 대비 3.06% 인상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2019년 적용 최저임금(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4. 여성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5. 연소자에 대한 보호

-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 보장

-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IV. 효력

- 대사인적 효력을 지니므로 부당한 해고는 허락될 수 없다. 여성.연소근로자 보호규정(헌법 제32조 제4항, 제5항)은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 효력을 지닌다(다수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 계약에 의하여 규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규정 위반내용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준미달의 계약 부분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판례).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